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제한다



무료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개정 주차장법 8월 28일 시행...시행 전 계도활동

특별시 직접 단속 참여...공영주차장 공공성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단속한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8월28일)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 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관리에 들어간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

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기주차 차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장기주차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자진 이동을 우선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구와 주차장 관리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장기주차가 발생하는 공영주차장은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안내표지와 홍보물을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제도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기영 기자

현대차-기후부-환경공단, 국내 '플러그 앤 차지(PnC)' 확산 위해 협력

현대차그룹이 '플러그 앤 차지(Plug and Charge, 이하 PnC)' 기술 국내 확산의 초석을 다졌다.

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용산구 렉시컨퍼런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국내 전기

차 PnC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PnC 인증 기술 및 권한을 무상 이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 EV 인프라전략실장 정규원 상무, 기

후에너지환경부 박관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한국환경공단 홍철규 친환경모빌리티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PnC는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충전,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국제 표준 기술이다.

회원 인증 카드나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과 달리 차량과 충전기 사이에 암호

화 인증 방식을 적용해 고객이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충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그동안 제조사 및 충전 업체마다 PnC 인증 방식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과 기술 보급의 어려움이 컸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내 전기차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다양한 충전소로 PnC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됐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PnC 인증서 및 인

증서 발행 권한을 기후부에 무상 이관한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은 이 인증 체계와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통합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정부 통합 인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는 물론 해당 기술을 탑재한 국산 및 수입 전기차 고객, 그리고 다

양한 충전 사업자가 혁신적이고 표준화된 PnC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전기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전기차 고객 누구나 보다 편리한 충전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을 무상 이관한다"며 "현대차그룹의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EV 인프라를 갖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영 기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반도체 800조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 협회장**

김 경

전남·광주
미래 100년
첨단산업의 중심!



